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찾기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여,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종배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 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의료전문가, 경찰관계자, 학계전문가, 학교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전 구미경 의원(국

민의 힘, 성동2)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이종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효원·오금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마약 퇴치에 관심 있는 서울시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 시간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료정책과장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마약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지언, 박수현 2명의 법률전문가가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진용 과장은 그간 서울시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속, 캠페인, 예방교육, 치료 및 재활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조기개입모델 도입, 청년 예방사업 확대, 마약관리센터 개소 등의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이지언 변호사는 마약퇴치라는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방교육의 첫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에 마약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등의 현행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수현 변호사는 마약예방 캠페인과 관련한 조례 내용 강화,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마

약 단속 강화,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병과조치 대상자 확대 및 전자발찌 부착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이 조 기발견과 재활의 중요성을, 학계 대표로 김나미 삼육대 중독학과 교수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토론자 모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찰 대표로 참석한 길유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앞선 3가지 발표 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경찰·서울시·교육청·의료기관·시민단체의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 현장 대표로 참여한 한은진 삼암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관리자 연수기회 확대 및 인력지원 강화와 우수 교육사례 확산 지원 등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청소년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지금의 마약범죄 확산은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약 예방 교육이 전쟁처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강남구의회,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참석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7일 서울 SETEC 제1·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구와 광운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로봇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역 인재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총 250여명이 참가해 경진과 체험을 펼쳤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윤석민·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개

인 및 단체 종목 경기를 관람하고 로봇·AI 테마 체험 부스도 직접 체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미래 로봇·AI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 강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강남구의회도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립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립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립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류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읽기선’ 문해력 정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 신설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통학권, 학습권, 문화접근권 등이 고르게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도립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유류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하린 기자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폐회...88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욱·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

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하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15일간의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제1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재봉 기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4억 2,875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현, 이하 예결특위)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

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 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하여 조정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김종배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경승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민수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